

정부 지침 일방 기습발표!



22일(금) 일방 기습 발표 강행

박근혜 정권이 결국 노동자들과 전쟁에 돌입했다. 22일 오후 3시 노동부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노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해왔던 내용을 정부가 강행하겠다는 기습 발표한 것이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결국 박근혜 정권의 막무가내식 행정 이 또 노동자들의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전면전 불가피!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2가지 지침은 그동안 전경련 등 재계 이익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서 재계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침 발표 즉시 “지침 무효”를 선언했다. 비상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법적 효력도 없는 불법지침을 앞세운 행정독재를 강력히 비판했다. 2015년 1년 내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온 만큼 노동부의 불법적인 지침 발표를 그대로 두고볼 수는 없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노동부 지침으로 꼼수를 부리는 정권에게 노동자의 분노를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기습 꼼수에는 강력한 투쟁으로!

금속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부의 노동개악이 통과되면 노동지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들에게 지옥을 선물하고 싶었던 것 같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가 없다. 노동개악 강행시 총파업 투쟁으로 돌파하기로 결정했던 우리의 결의를 다시 확인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1년간의 투쟁이 불법적인 정부 지침에 무너질 수는 없다. 총파업투쟁으로 노동개악을 반드시 끝장내자!

금속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지침

1. 금속노조 전 지부, 지회는 25일(월) 비상회의 및 중식집회 등을 통하여 정세를 공유하고 이후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결의한다.
2. 26일(화) 전체 확대간부 파업, 27일(수) 지부별 세부방침을 세워 4시간 이상 파업투쟁에 복무하고, 지역별 총파업 집회에 참석한다.
3. 양대지침 불복종 선언운동에 돌입한다.
 - 1) 양대노총이 양대지침 ‘불복종운동’을 공동선언하고 공동투쟁하도록 요청한다.
 - 2) 전체 조합원 및 대국민 선언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조직한다.
 - 3) 현직 국회의원과 이후 모든 총선 출마자의 ‘선언 서명’을 조직하고, 결과를 모아 총선에서 반노동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한다.
4. 29일(금) 전체 확대간부 상경투쟁을 전개한다.
5. 이후 투쟁 방침에 대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28일(목) 중집에서 추가 논의하여 확정한다.

총파업 투쟁계획

- 1/25(월) 지회별 중식집회
- 1/26(화) 파업집회
(16:00 대전 타임월드)
(16:00 청주 상당공원)
- 1/27(수) 파업집회
(16:00 대전 타임월드)
(16:00 청주 노동지청)
- 1/28(목) 파업집회
(16:00 대전 새누리당)
(16:00 충북도경찰청)
- 1/29(금) 확대간부 상경투쟁
- 1/30(토) 전국집중 총파업대회
(서울 시간, 장소미정)